



점점없이 갈수록 꼬여가는 '전남권 의대 설립 공모'

순천지역 "기존 용역결과 공개시 공모 참여 검토" 조건 제시
전남도 "갈등 증폭 우려 공개 불가" '5자 회동' 성사 미지수
"공정하고 공평무사하게 처리" 약속 양 대학·지역 동참 호소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 문제가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전남도의 '공모 방식 의대 설립 대학 추천' 구상에 반대해 순천지역에서 "기존 의대 유치 용역 결과 공개 등 3개 조건을 수용하면 공모 참여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조건을 제시한 데 대해, 전남도가 "지역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방침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 관련기사 3편

전남도와 순천지역 양 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오는 12일로 예정된 김영록 전남지사과 목포대·순천대 총장, 목포시장·순천시장 간 '5자 회동' 성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병은 순천대 총장·노관규 순천시장·정병희 순천시의회 의장은 7일 오전 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년 만에 힘겹게 얻어낸 의대 신설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3개 조건을 제시한다"고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3개 조건은 ▲기존 의대 유치 관련 용역 결과 공개 ▲구체적인 공모 기준·지표 명시한 공모 방안 등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이해당사자 기관과 협의·합의 후 공개하고 도민 동의 얻을 것 ▲전남

도의 공모 결과로 탈락한 지역의 건강권 침해 대책을 각 지역 정치권·지역민과 합의해 제시 등이 골자다.

이들은 용역 결과 공개 등 조건이 이행될 경우 전남도 공모 참여 여부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남도는 두 차례에 걸쳐 전남 의대 설립에 대해 용역을 진행했음에도 결과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가 특정 지역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의대 설립 문제를 공모에 부치는 것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전남도가 오는 12일 개최를 추진 중인 '5자 회동'에 대해서도 3개 조건에 대한 전남도의 대응을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노관규 시장은 "전남도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의대 공모와 관련) 이해 조정이 될 것인지 고개를 가우뿔하게 한다"며 "(12일) 회동에 가는 것은 오늘 입장문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이 이상 이야기할 수도 없는데 (전남도가) 답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순천지역에서는 "전남도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전남도의 의대 설



오월 영령의 숭고한 뜻 기리며... 5·18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 봉사원들이 조화를 교체하고 묘비를 닦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 ▶ 관련기사 2·6편 /김애리 기자

립 관련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기존 용역 결과 공개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정부 요청에 따라 추진 중인 전남도의 대학 추천 절차에 순천대도 참여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순천지역에서 제시한 3개 요구 사항 중 용역 결과 공개와 관련, 전남도는 "두 차례 의대 설립 용역은 문제인 정부 때 전남도 의대 신설 당위성을 마련하

고 정부 설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증원 규모는 400명으로 현재 2천명 증원과 다른 여건에서 마련됐다"며 "용역 세부 자료가 지역별 유불리에 맞춰 편향적으로 이용된다면 지역 갈등이 더욱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요약서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용역은 특정 대학과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고 비공개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구체적인 공모 방안'에 대해 전남도는 "공모 용역은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관에 위탁해 양 대학 및 도민

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모든 과정을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탈락 지역 대책의 경우 전남도는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 차원에서 해당 지역 도민의 건강권과 지역 발전을 위한 특단의 보완 대책도 용역에 반영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남도는 "전남도 국립의

대 설립은 200만 도민의 건강권·생명권 확보를 위한 다시 없는 기회"라며 "국립의대 신설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가장 공정하고 공평무사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 대학·지역의 공모 동참을 호소했다.

이처럼 순천지역에서 요구한 3개 조건 중 용역 결과 공개에 대해 확연한 입장 차를 드러내면서 오는 12일 보성군청에서 열릴 예정인 '5자 회동'까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재정·순천=정기기자

'붕괴' 화정아이파크 입주자協 "지상 1-3층 존치 찬성"

정밀 안전진단 검사 결과 '안전성 확보' 조건부 수용

붕괴 사고로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이 예정됐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예비입주예정자들이 비주거(상가)층에 대해 '정밀진단결과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존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7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전날까지 '조건부 철거 범위 축소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상가로 구성된 지상 1-3층을 조건부 철거하지 않기로 했다.

투표에는 입주 예정자 780명 중 688명(88.2%)이 참여했다. 이 중 503명(73.1%)이 1-3층 존치에 동의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추후 진행될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층의 존치가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번 투표 결과를 포함한 의견을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예비입주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광주 보건대학교에서 '입주 지연 해소·주거안전 방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철거 범위에 대해 입주 예정자들이 과의견했다.

철거 범위에 비주거 상가 구간인 지상 1-3층이 포함돼 공사 기간이 1년 가

까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자 해당 협의회는 입주 시기·지연 등을 우려 시공사인 HDC현산 측에 축소 범위 논의를 제안했다.

이에 HDC현산은 철거 범위가 축소될 경우 비용 등을 고려해 ▲거실 창호 변경 ▲경관조명·동 출입구 기둥·아파트 시설물에 좋은 자재를 활용하는 것 등을 담은 9개 방안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제시했다.

이승엽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는 "정밀 안전진단 후 안전하다는 검사 결

과가 나올 경우에만 지상부를 존치하기로 찬성한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예정자들도 있어 진단 검사를 받음 없이 하고 HDC현산 측의 제안을 살펴 보겠다"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Today

- 폐품팔이2년째어린이집간식기부 7면
- 카네이션 판매량해마다감소 12면
- KIA네일, 헬힐릭스플레이어선정 16면

2024 광주·전남 관광아카데미 원우 모집

6월 5일 개강 | 특강 5회 · 2박3일 선도 관광지 견학

광주·전남지역자치단체의 관광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관광아카데미는 실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 과정으로 이론 및 국내 관광 선도지역 견학 등 현장 학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광주매일신문이 개설한 '광주·전남 관광아카데미'에서 전문지식을 통해 관광 산업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의 밝은 미래를 여는 주역이 되십시오.

광주·전남 자치단체와 민간축제위원회, 행사 기획사, 관광에 관심있는 시·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모집인원** 50명 안팎
- 교육기간** 2024년 6월 5일 개강, 6월 12일-14일 현장학습(여수·통영), 6월 20일 종강
- 지원자격** 광주·전남 자치단체 관광 관련 공직자, 이벤트 기획사 임직원 및 관광산업에 관심이 있는 시·도민
- 강의방식** 전문가 특강 5회 / 현장학습(2박3일, 여수·통영)
- 수강료** 250만원(현장학습비 포함)
- 모집기간** 2024년 5월 31일까지
- 문의** 광주매일신문TV본부 062) 650-2024